



# 濁流清論

제15호 2011년 6월 13일(월)

발행인 : 김철환 / 편집 : 편집위원회

<알려드립니다>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접수하실 원고를 교수회 이메일 ( lisani@ajou.ac.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위의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방간 기간 동안은 휴간합니다.

탁류청론 16호는 9월 초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 < 목 차 >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정당한 합리적 의심으로 깨달은 2010년 결산자문 후기	1
처장에게 듣는 학교 정책	4
전문가가 보는 현안 이슈	7
캠핑 캐럴 유독성 물질 매립에 대한 법률적 단상	7
오래 덮어두고 있던 환경문제를 바라보며...	8
고업제의 건강 영향	9
소 식	10
김준업 선생님을 기억하며	11
소통과 담론	12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 정당한 합리적 의심으로 깨달은

### 2010년 결산자문 후기

평의원회 의장 강명구

이 글은 2011년 4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 까지 물경 세 시간 반을 휴식 없이 깨알 같은 숫자들을 앞에 놓고 경험한 정신적 고투기이다. 물론 이러한 정신적 “고투”의 경험은 세 시간 반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회계에 문외한인 사람에게 배달된 두툽한 교비 및 의료원 회계 관련 책자를 전달받았던 회의 시작 전 사나흘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회의 마친 후 혹시 잘못된 것은 없나를 되뇌어야 하였던 그 후 며칠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필자 모시기가 수월찮아 결산자문 회의 참가 후기(後記)까지 써야 하는 머릿속 쥐어뜯는 만만찮은 분량의 시간들도 대열에 합류해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분투와 고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평의원으로 ‘당첨’되어 난생 처음 참석한 결산자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역할까지 맡게 되었으니 설상가상(雪上加霜)이란 바로 이 경우를 지칭함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서두가 장황하면 대단한 이야기가 뒤따를 것으로 오해 받기 쉬우니 이쯤에서 에두르지 않고 말씀 드린다. 회계에 별 지식이 없는 한 대학 선생이 오로지 (관심이 조금 가미된) 의무감 하나에 의지하여 물경 6000억 이르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한 해 살림살이를 이리 저리 살피고 생긴 의문과 이해를 서술한 글이니 너그럽게 보아주시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드릴 부탁이 굳이 수동적이고 방어적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하게 그래서 심지어는 뻔뻔하다할 정도의 수준까지 읽는 이의 너그러움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다. 나의 뻔뻔함에 대한 몇 가지 근거를 대어보자.

결산 자문이라는 게임은 애초부터 내게 불공정한 거래요 게임이다. 오랜 기간을 애오라지 숫자로 시간을 보낸 회계 전문가들이 작성한 서류를 주로 문자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직업을 가진 내가 어찌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조언을 주고 견제를 할 수가 있던 말인가? 그럴리아 없겠지만 감추고 숨기고 위장한다면 전문가들도 좀 고생해야 하는 것이 다반사이거늘 나 같은 초짜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정답하려면 그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뽑아 놓은 동료 교수들인 것이다.

아울러 때로는 꼬치꼬치하고 또 때로는 황당한 내 질문의 대상이 된 해당 보직교수

와 학교 및 병원의 회계관련 담당자 여러분도 나의 뻔뻔함을 너그럽게 받아들여 마땅하다. 왜냐하면 국회를 통과한 사립 학교법이 나에게 그런 의무와 권한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회계장부의 내용을 쉬운 말로 풀어 묻고 답해서 대학의 구성원들이 알아듣기 쉬운 상태로 현황을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나를 뽑아 놓은 것이니 나의 무지와 뻔뻔함이 문제가 아니라 무지와 뻔뻔함을 불가피하게 만든 전문가들이 문제인 것이다. 한마디로 대학평의원회란 대학 운영진들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맺도록 제도화된 실체이니 전문성 미비로 인한 다소간의 무지와 뻔뻔함은 전혀 거리낄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지와 뻔뻔함은 창피함과 숨김의 대상이 아니라 권하고 장려해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에 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얼 좀 안다는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한 지식의 축적인 동시에 기존의 지식에 의문을 품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지식의 경화(硬化)인 것이다. 얹이 딱딱해 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여 얹이 죽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무엇을 알아가며 동시에 무엇을 알아가는 능력을 제거하는 자기모순을 되풀이 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작고한지 10여 년 쯤 되는 미국이 자랑하는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가 정의를 찾아가는 원초적 방식으로 제시한 “무지(無知)의 장막”(veil of ignorance)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무지의 장막을 치는 행위란 다름 아닌 선입견이나 자신이 속한 지위에 따른 편견을 줄이라는 언명(言命)이니 이는 곧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의심이 난다면 묻고 따지라는 말이다. 굳이 롤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나는 바로 이 무지의 장막을 당당하게 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는 다음 번에도 무지의 장막을 걷지 않을 것이다. 아니, 내가 걷을라치면 동료 교수와 동료 구성원들이 다시 쳐주어야 할 것이다. 당신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좌고우면(左顧右盼)하지 말고 오직 진실만을 찾아가라고 주문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에 이러한 나의 합리적 의심이 불편하여 ‘뻔한 것을 무에 그리 따지느냐, 의도가 불순하다. 왜 꼭 의심 가는 쪽으로만 생각하느냐, 대학의 발전을 위해 좀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보직자가 있다면 그는 보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문외한인 내가 보기에 결산자문 보고서는 ‘중요하지 않은 많은 것에 대하여는 매우 정확하고 중요한 적은 것에 대하여는 매우 불명확하다’는 통계에 대한 의미 있는 비난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수 백 쪽에 이르는 방대한 숫자의 더미를 아무리 살펴도 (물론 내가 무지한 까닭도 있겠지만) 근자에 들어 일반적 상식을 가진 학내 구성원들이 가지는 합리적 의심에 걸맞은 손쉬운 답변은 찾기 힘들었다. 내가 던지지 않을 수 없었던 합리적 의심과 그에 대한 결산자문서의 보고내용 소개는 잠시 미루고 우선 전반적인 그림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전반적으로 보아 대학에 돈이 풍성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 아끼고 줄여 써야 할 형편에 있음은 어렵잖게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약대다 법전원이다 하여 돈 쓸 곳은 많아졌는데 적립금으로 쌓아 놓은 돈도 많지 않고 막상 돈 들어올 곳은 의료원 수익과 대학 등록금 말고 마땅찮아 보였다. 의료원 또한 39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내었다 하더라도 근자에 아주대 병원이 처한 점점 더 치열해가는 경쟁관계와 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재투자자의 필요성을 고려하자면 수익은 분배 가능 수익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재투자 재원에 다름 아닐 것이다. 본교 경우를 놓고 보자면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더 주고, 우수 연구인력을 충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수들 연구비 더 주는 것은 그야말로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이런 와중에서 펀드 투자로 기회비용 포함해서 근 100억을 날렸으니 설상가상이 따로 없다. 누가 돈 잃기 위해 투자하였겠느냐, 어디 아주대만 잃었느냐, 고대도 잃고 누구도 잃고 하였는데 왜 그렇게 자해(自害)를 하느냐, 자살 골 못 넣어 환장했느냐, 이제 좀 그만해라, 등등 비난 여론이 많았다. 교묘한 비난이지만 백보 양보하여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돈 더 벌려고 투자했지 잃으려고 투자한 것 아니라는 의도의 진실성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그러나 몇 몇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이러한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두 가지 점에 있어서 그렇다. 하나는 불법으로 투자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일이 터져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해당 책임자들은 아니라고 우기지만 대학이 투자를 할 경우 기금과 유동자금을 혼용하면 안 된다는 명문법규정을 어겼으며 정작 문제가 되자 혼용하지 않은 것처럼 꾸민 정황은 두 말할 나위 없이 불법 회계분식(粉飾)인 것이다. 이런 김새를 알고 합리적 의심에 근거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교내에서의 해결책을 논하자고 하여도 익히 알려져 있듯이 관련 담당자들은 미봉(彌縫)으로 몽개고 외부에 알려지자 해교행위라는 적반하장(賊反荷杖) 논리를 들이댄다. 우여곡절 끝에 교과부에서 불법이고 잘못이라는 공식 견해를 보내 오고 나서야 마지못해 (사건의 중차대함을 사장시켜버린) 간단한 토탈공지 몇 줄로 개선의지를 확인함에 그쳤다. 누구를 굳이 별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누가 투자를 지시하였고, 왜 투자하였고, 어떻게 투자하였고, 구체적인 행위는 누가 하였고 따라서 궁극적 책임은 누구 누구에게 있으니 앞으로는 이러이러하게 고치겠다는 백서라도 하나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큰 액수를 상부의 지시나 감독 없이 몇 몇 관련 해당 직원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단 말인가? 관리자들은 다 눈 뜬 장님이란 말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일 아니던가? 날린 돈은 법인이 내놓은 돈이 아니고 학생들 등록금으로 조성된 기금이요 유동자금이 아니던가? 그래서 도덕적으로 더욱 타당하지 못한 것이다. 재

단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관이나 학칙 개정하는 수고를 좀 이런 건설적인데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하면 없던 권위도 생겨나는 것이거늘...

관심을 가지고 본 또 다른 이슈는 건축비 관련이었다. 어려운 대학 재정 형편 하에서 근자들이 완공되었거나 건설 중인 건물이 종합관을 포함하여 4개 동인데 총 건설 비용이 810억이 든다고 나와 있었다. 도대체 이 건물들 짓는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누가 얼마에 건축물을 지었고 또한 짓고 있는지, 더 싸고 튼튼하게 지을 수는 없는지 등등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810억이면 자체로서도 큰돈이지만 아주대의 예산규모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잘 아시다시피 성호관을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임시변통하면서 강의실이 모자라게 되자 블록제 시간표가 나오고 (정작 대학행정에서 한 발자국 떨어진 법인 사무국은 그대로 남겨두고) 본부 건물이 캠퍼스 외곽으로 이사 나갔다. 본부가 들고 나는데 드는 이사비용은 그야말로 “깨지는” 혹은 “날리는” 돈이다. 사정이 이렇진대 아껴 쓰고 또 아껴야 마땅하다. 토건경제하에서 팽창한 건설 자본이 넘치고 넘쳐 기업개선작업 들어간 곳이 한 둘이 아니니 그야말로 이문만 조금 남아도 싸게 잘 지어 주겠다고 나설 곳이 적잖을 것이다. 그런데 왜 꼭 자동차 파는 것이 주목적인 회사가 만든 건설사나 혹은 이 건설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소규모 건설사가 아주대학교 건물 공사도 맡아야 하는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합리적으로 의심이 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묻고 따지고 자료를 요구하였다. 총무처장은 선선히 요구에 응하겠다고 하였으나 달포가 지난 지금까지 도착한 자료는 없고 다만 공개의 수위를 좀 조절하였으면 하는 눈치성 대응만 감지되는 수준이다.

얘기 나온 김에 돈 문제 관련하여 묻지 않을 수 없었던 재단관련 질문 몇 가지도 덧붙이자. 재단이 대학과 병원에 지불해야 하는 혹은 지불하기로 약속한 경상비 전입금과 법정 전입금이 여러 차례 알려진 바와 같이 미납되었거나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상태이다. 재단이 돈이 있으면서도 지급을 안 하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자신들이 내야 할 돈을 대체하니 140억에 이르는 돈을 환수하자는 캠페인 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왜 조금 밖에 안 내는지 당연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미 대학평의원회에서 지난 5월 25일 발송한 <2010년도 결산 자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나왔으니 재탕은 피하고 다만 이 질문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소식만 하나 전하자. 1975년에 대우재단이 아주대학을 인수하였으니 올해로 만 36년이 된 지금까지 대우학원은 아주대학에 총 얼마를 투자하였을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 놀라지 마시라. 1000억이 못 되는 9백 몇 십 억이다. 그렇다면 대우재단의 모체이고 현재까지 음으로 양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 대우 그룹은 아주대로부터 어

느 정도의 혜택을 받았으리라고 여러분은 추측하시는가? 투자만 했지 혜택은 전무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진한 분, 계시면 나오시라. 이리 저리 셈법을 동원해 탐구해보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주입’되어온 대학 주인론의 상식적 해답에 의문이 생길지 누가 알겠는가?

지난 일 년 간 총장 직무대행의 직책을 수행한 박 중구 현 교육대학원 교수 관련하여 누가 어떤 돈을 어떻게 썼는지도 상세하게 물었다. 뭐 그렇게까지 한 개인의 문제를 표적 삼아 일일이 캐느냐고 힐난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되물고 싶다. “왜 묻지 말아야 합니까?” 무지의 장막을 치고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들이 산적해있으니 당연히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교수로 재 보임되는 과정도 자신이 제 2 차관으로 있던 교과부가 무리수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총장 자리를 탐하다 보니 무리하게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경우가 다대하였다. 직무대행 시절 단과대학을 돌아가며 거듭한 폭탄주 순배가 꼭 나무랄 일은 아닐지 몰라도 공사구분이 모호하니 술값의 재원은 따져볼 일이 아닐 수 있지 않은가? 그 행실이 모호하여 학우들이 지탄의 대자보를 붙이지 않을 수 없었던 지난 번 학생회 간부들이 다녀온 특혜성 해외 연수와 누가 보아도 의문스러운 학생회의 특별 장학금 지원자 모집은 총장 선거 관련하여 눈가리고 아웅의 성격이 짙으니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교수사회의 총의를 얻지 못하고 재단이 일방적으로 선임한 신임 안 재환 총장이 직권으로 특혜를 주어 박 중구 현 교육대학원 교수는 강의를 한 과목도 하지 않아도 꼬박 꼬박 급여가 지급되는 상황이니 도대체 저간의 사정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길어졌다. 제 정신 박힌 사람이 묻는다면 의문이 의문을 묻고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이야기 하지만 누가 누구를 별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도대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우선 적시(摘示)해 보자는 이야기다. 일은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몽개듯 넘어가는 것은 공공의 조직인, 더 나아가 진리를 추구한다는, 그 어느 조직보다도 도덕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대학에서는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일이다. 그래서 합리적 의심으로 물은 것이다. 나를 녀석지 않은 여가 시간을 쪼개어 어느 정도는 의무감으로 쓴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련다. “합리적 의심에 대한 관용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비난하여도 좋다. 다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은 합리를 가장한 무관심이다.” 라고 말이다.

# 처장에게 듣는 학교 정책

기획 처장 김민구

## 1. 기획처의 주요 업무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바탕 위에서 대학발전의 전반적인 밑그림과 대체적 방향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처는 직제규정에 나타나 있듯이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동 계획의 집행에 대한 심사분석, 대학평가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기획팀 및 예산팀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고등교육통계와 정보공시와 관련된 업무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은 개교 50주년을 맞는 2023년에 ‘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세계 100대 대학’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우선 1단계 목표로 오는 2013년까지 국내대학 Top10에 재진입하고, 2단계 목표로 2018년까지 아시아 Top50에 진입하며, 2023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획처에서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준비 중에 있으며, 교내 구성원들의 의련 수렴을 거쳐 최종안 확정하고 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아주 구성원이라면 모두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외부기관의 대학평가에서 7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위기를 겪어오면서 대학순위는 다소 떨어졌지만 (2010년 13위), 아주대가 갖고 있는 우수한 잠재력은 여전히 시련을 이겨낸 만큼 더욱 단단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입증하듯이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법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을 유치하였고, 교육역량강화사업 4년 연속 선정, 4년간 200억을 지원받는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사업(ACE)에 선정되었으며, ERC, TLO 등 국고지원 연구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 - 광고 신도시 건설의 호기를 대학발전과 연계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예산은?

우리대학은 의료원이 중심이 되어 그 동안 광고신도시 개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는 광고신도시 개발이 우리대학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어 그 만큼 기회이

면서도 자치 고립무원의 섬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대학과 직접 연관되는 광고신도시 지역은 산학관 옆 윌드컵 경기장 방향의 도시지원시설 7구역(22,000여평)과 의료원에 인접한 도시지원시설 8~10구역(20,000여평)입니다. 7구역의 경우에는 이미 국내 굴지기업의 종합연구소(1천명 상주)가 입주하는 것이 유력시 되어 있기도 하여, R&D 단지로써 우리대학교와 산학협력이 매우 기대되고 있어 이 또한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8~10구역의 경우는 8, 9구역의 일부 토지를 구입하여 의료원과 관련된 사업 및 기숙시설로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중증외상센터 및 아동병원을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광고신도시 도시지원시설로 구획된 7~10구역에 대하여 본교에 유리하게 개발·구획되도록 하기 위해 ‘광고신도시특사업추진기획단(단장 1명, 부단장 2명, 의료원 담당 직원/조교 각1명)’을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 왔으며 또한 ‘광고신도시특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총장, 위원 10명)’, ‘광고신도시 도시지원시설 수익사업추진TFT(위원장, 위원 4명)’ 등이 구성되어 꾸준히 활동하여 왔습니다.

현재 월드컵방향의 7구역과 의료원 방향의 8~10구역으로 우리대학과 연결되는 4차선 진입로가 확정되어 있어 광고신도시와 연결·관통할 수 있는 정문이 동·서로 2개 확보된 상태입니다.

### - 기획처가 대학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 지나치게 일상적 행정업무에 매몰되는 경향은 없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획처의 두 팀에서 맡고 있는 일은 다양하고 절대적인 업무의 양도 많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자칫 일상적인 행정업무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적 업무는 대학발전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획처의 주요 업무는 ‘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겠다는 아주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계별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각종 제도개선 및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대내 부서(대학) 평가를 진행하며, 건축물 신·개축 계획 수립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일례로 이번에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의 경우에도 ‘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대학’이라는 아주비전의 실천의지를 담아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융복합 창조인을 의미하는 ‘다산(茶山)형 인재’양성을 위한 선진화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듯 대학발전의 큰 그림 속에서 세부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발전방향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들은 제대로 이루어졌나?**

구성원간에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조직 발전’의 심장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이고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아주비전2023’은 몇 년에 걸쳐 수차례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 다듬어졌습니다.(물론 총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외부요인도 있었지만..)

‘아주비전2023’의 근간은 잘 아시겠지만 2003년 ‘아주비전4U’입니다. ‘아주비전4U’는 법인, 본부보직자, 주요행정팀장, 총동문회, 총학생회로 구성된 ‘아주비전위원회’로부터 출발합니다. 아주대학의 다양한 구성체의 의견을 담고 공유하기 위한 노력은 어느 타 대학에서 볼 수 없을 만큼 각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2000년대 초반의 소용돌이 속에서 구성원간의 ‘소통과 공유’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또 한 차례의 위기를 겪으며 각 단과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교수를 중심으로 ‘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논의와 연구,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다듬어진 발전계획이 지금의 ‘아주비전2023’입니다. 또한 2008년 11월에는 내부구성원 외에 지역관계자, 학부모, 언론기관에 이르기까지 ‘아주대학의 발전계획’을 선포하고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비전선포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주비전2023’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언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공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이 점에 대하여 구성원들과 중간과정에 대해서도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신입총장님의 ‘4년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며 곧 구성원들에게 보여드릴 계획

입니다. 그리고 연차별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구성원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단과대학(학부, 전공), 행정부서, 연구기관, 센터들이 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정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로써 모든 부서의 모든 구성원들이 대학방향에 대한 공유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는 선순환 공유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2. 서문호 총장시절 성대한 선포식을 가졌던 <아주비전 2023>과 자율경영원칙은 아직 유효한가? 추진상황은? 이를 위한 예산의 조달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문제가 있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아주비전2023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신입총장님께서 ‘아주비전2023’ 수립을 추진하였던 ‘대학발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였고, 누구보다도 아주비전2023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수립과정 중에 진행된 수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아주 구성원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아주대학교가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추진계획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현재 기획처에서는 발전계획 ‘아주비전 2023’의 단계별 목표달성(1단계 ‘국내사립대학 Top10 재진입’, 2단계 ‘아시아 Top50’, 3단계 ‘세계 100대 대학’)을 위한 액션플랜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액션플랜은 지난 해 운영한 액션플랜추진위원회의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담았고, 현재 신입 총장님의 ‘임기’내에 중점 추진사업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율적 책임경영’은 기조는 유지하되 실질적으로는 ‘자체 평가’에 무게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학발전계획과의 연계적 관점에서 모든 부서가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스스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평가대학평가에서 중요한 핵심성과지표(KPI)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통을 위해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은 재원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외부의 자금을 유치해 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부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가가 중요합니다.

외부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금모금 부서를 총장직속 본부로 강화시키고 기금모금을 위한 전문조직 체계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자금운용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원가를 분석하고, 부서 사업과 예산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통을 해나갈 것이며, 특히 국고 교육사업의 경우에는 성과과 예산을 철저히 모니터링 할 뿐만 아니라 사업종료 이후에도 대학에 제대로 착근되어 성과가 지속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3. 대학발전을 위하여 여러 업무에 대한 평가기준의 확립과 공유 및 환류(feedback)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져 왔나?

앞서 언급했듯이 어느 조직에서는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자체평가 - 구성원 공유 - 계획으로의 피드백 되는 선순환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대학은 2007년부터 ‘단과대학(학부) 자율적 책임경영’ 도입하여 단과대학(학부)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발전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하는 ‘Plan-Do-See 환류시스템’을 정착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3년을 추진해 오면서 일부에서는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지속여부’에 대하여 진단이 엇갈리고 있지만, 각 부서(본부, 단과대학, 학부)가 발전목표 설정-사업계획 및 추진-성과 평가-feedback’ 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기틀을 마련한 측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4년차로 들어선 ‘단과대학 자율적 책임경영’은 지금까지 주신 의견들을 반영하여 기초는 유지하되 자체평가에 더 무게를 싣고 추진할 계획이며, 전공(학과) 단위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정원 조정, 미래지향적 융복합 학문분야 신설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본부 부서에서 대해서도 대학발전 목표 달성과 조직효율화를 위한 ‘진단적 관점’에서 ‘부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유하고 환류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운영수지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불필요한 부서는 과감하게 통폐합시키는 반면에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전문 조직 체제를 갖추어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 4. 기타 질문사항

#### -최근에 지어진 학교 건물들의 건축비 부풀리기 의혹들이 있습니다. 건축비 감정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의사가 있는지?

최근 우리 대학은 2007년 7월 신학생회관 완공을 시작으로 2010년 2월에는 종합관을 완공하고 2012년 2월에는 약학관 완공을 계획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여러 과정과 절차를 기준에 따라 거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적정한 건축비와 품질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절차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에 신축된 건물들(산학협력관 증축, 신학생회관, 종합관, 약학관)의 건축비는 조달청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자료는 총무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 없는 의혹 확산은 모든 구성원이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민자 기숙사 추진 현황은?

우리대학 기숙사 확충은 구성원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숙사 확충은 실 기숙사 수요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대학이 계획하고 있는 교육사업(집중교육, 글로벌 트랙교육 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사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민자 기숙사를 신축하였거나 신축 중에 있어 민자기숙사 신축이 기숙사 부족 해결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현실적 해결 방안임에 틀림이 없으나 여러 고려해야 할 사항들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민자는 기숙사비 인상을 조래하는 만큼 적정한 기숙사비 보장을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는 기숙사 신축방안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총장님이 직접 우선 사업으로 생각하고 뛰고 있습니다.

#### - 대학 건물 내 공간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대학본부의 이전 포함)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근 새로운 건물들이 신축되고 있거나 구성원 입장에서는 항상 필요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간은 건물 신축을 통해서 확보할 수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적절한 공간운명을 통해서도 공간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대학의 법정교사면적 확보율은 종합관을 신축하면서 100%를 훌쩍 상회하고 있어 공간 운영의 효율성이 더욱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2월 종합관이 완공되면서 1차 공간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종합관을 포함한 성호관, 율곡관, 신학생회관, 캠퍼스플라자를 대상으로 전교적 2차 공간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간배정의 방향은 교육·연구·학생 공간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캠퍼스마스트플랜에 기반하여 캠퍼스 코어(성호관) 활용을 최대화하고 이를 통해 주변 건물의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성호관은 교내 이공계열 존(zone)과 인문사회 경영계열 존(zone)의 중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통적이면서 두 계열의 부족분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용도의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성호관의 효율성은 물론 주변 건물의 공간 취약을 보완함으로써 학내 전체 공간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캠퍼스플라자에 흩어져 있는 행정본부 부서들도 교내 한 곳으로 이동하여 행정서비스의 유기성을 높이고자 하며, 반대로 교육과 연구에 직접적이지 않은 공간 즉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은 캠퍼스플라자에 배치하여 책임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공간 배정은 금번 하계방학을 기하여 이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전문가가 보는 현안 이슈 : 고엽제 오염

전문가가 보는 현안 이슈

### 캠프 캐럴 유독성 물질 매립에 대한 법률적 단상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 내 특정구역이 1977~1982년 고엽제 등 유해·독성물질들을 매립하는 소위 위험 폐기물 매립지(hazardous waste landfill)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의 보건 및 지역 환경 훼손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은 매립 물질의 종류, 양 그리고 매립 후 취한 방지 조치 등 실제적 내용이 한미 당국이 공동조사를 통해 밝혀진 후에야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고엽제 등 유독 화학물질의 위해성이나 오염된 토양을 복원을 위한 공학적 방법 등은 본인의 소관 전공이 아닌 이유로 별달리 언급할 수 없고 단지 본인이 연구하는 국제법 및 환경법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단상을 나누고자 한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동 사건에 대해 주한 미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법적 책임이 국제법적 책임 그리고 국내법적 책임으로 나누어진다면, 국제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미군이 국제법을 위반했는지에 따라서 답이 결정될 것이다. 국제법이란 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 의해 형성되므로, 한국과 미국 간 체결된 한미행정협정(SOFA)은 적용가능한 주요 조약이 될 것이다. 특히 해외에 주둔하는 군대의 환경 위해행위에 대한 국제관습법이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준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미행정협정은 실질적으로 유일한 국제법적 판단 근거이다.

한미행정협정은 1966년 제정되어 1991년, 2001년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내용은 2001년 개정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의 체결 및 후속 조치로서 채택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 A”에 처음 규정되었다.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는 본 건과 같은 환경 오염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사고가 보건에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치유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이 KISE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해당 치유 의무가 2001년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신설된 규정이라 동 사건에 본 의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법은 기본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 협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전망이다.

2002년 5월 체결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 A”에 따르면 2002년 1월 18일 이후 한국으로 반환되는 기지 내 오염조사와 치유에 필요한 비용을 미군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캠프 캐럴이 반환 될 경우 미국은 그

치유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향후 반환되는 기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반환대상이 아닌 기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상기의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최근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양정화 비용을 우리나라가 부담하기로 한 국방부의 협상 전례를 보아 향후 협상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결책이 없는 편이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법적인 책임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주한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한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속지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법 및 집행 관할권 적용은 우리나라가 국제법에 의해 이를 스스로 배제할 수도 있다. 외교관 개인이나 외교공관에 우리나라의 법집행을 자제하는 이유는 1969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법적으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간 체결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제3조 2항은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 미군은 우리나라의 환경법을 존중(respect) 할 뿐 준수할 법적 의무는 없다. 미군이 파견되어 있는 국가 중 유일하게 독일만이 명문으로 주독 미군에게 독일 환경법규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행정협정을 맺고 있다. 아무튼 우리나라 환경법이 동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해당 유독성 폐기물이 매립될 당시에 과연 우리나라 환경법에 해당 매립행위를 금지하는 법규가 존재하였는지도 의문이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된 것이 1986년이라는 사실은 이를 확인하여 준다.

허무하기는 하지만 국제법도 우리나라 국내법도 이번 사건에 속 시원한 답을 주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그것은 국내법 중 우리나라 법이 아닌 미국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 환경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의 문제는 미국 영토 외에 주둔하는 연방정부의 행위에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이 적용되는 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다른 바가 있다. 1993년 Environmental Defense Fund 대 Massey 사건에서 미 연방 항소심에서는 남극 과학기지에 있는 연방정부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국가환경정책법이 적용된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동 사건을 제외하고는 특히 해외 파견 미군에게 연방환경법이 적용된다고 한 적은 단 한 건도 없다.

그러나 본인이 미국 국내법을 적용하자는 이유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조하여야 할 법은 주한 미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미국 국내법인 군형법이다. 미군법(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제5조는 동법이 해외 주둔군에게도 적용됨

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09조는 환경침해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구체적인 유독물질 처리에 관한 절차 및 지침을 두고 있다. 또한 내부적인 법규 및 지침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92조 3항은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1992년 독일 주둔 미군 병사가 불법으로 영내에서 유류를 방출하여 기지 밖의 환경에 피해를 가져온 사례에서 군사법정에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도 있다.

아마도 사회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공헌하는 점을 들어 이러한 환경 피해 사례는 우리가 감수하

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나라의 것이 아닐까 한다. 미국인의 실용적인 사고방식은 안보는 안보이고 범위받은 범위받이다. 주한 미군에게 왜 자국의 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것이 한미 관계를 해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특히 21세기 들어 환경의 문제가 사회의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려야 할 환경에 대한 위해를 가버어 여긴다는 것은 현 세대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일 것이다.



전문가가 보는 연안 이슈

## 오래 덮어두고 있던 환경문제를 바라보며...

환경건설교통공학부 권정환

1970년대 미국 뉴욕주 버펄로 근교의 러브운하(Love Canal)매립지에 조성된 주택가와 학교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물질의 유출이 관찰되었고, 화학물질 유출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근 주민들의 만성천식, 신장 및 간질환,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기형아 발병율 등이 보고되었다. 이 지역은 당초 러브운하 건설작업이 중단된 지역으로 1940년대부터 1952년까지 후커화학회사가 인수하여 화학물질 생산 후 발생한 2만여 톤의 폐화학물질이 함유된 철제드럼통을 매립한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당시 별다른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없이 1953년 나이아가라 시위원회에 기증되어 토지용도 변경을 거쳐 주거 및 공공용지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1977년 시당국과 연방정부의 조사를 통해서 토양 및 지하수가 유독성 물질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연방환경청은 1978년 이 지역을 환경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거주 중인 주민들을 소개시켰다. 이 지역의 건물과 학교 등은 모두 철거되었고, 오염정화를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 연방정부는 1980년 슈퍼펀드법(Superfund law)\*으로 더 잘 알려진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제 30년 정도 지난 이 사건은 세계 각국의 토양오염관련 법령제정의 계기가 되었고, 교과서에서도 언급되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례가 되었다.

러브운하 사건에서도 그랬고, 현재 각종 언론의 헤드라인을 채우고 있는 캠프캐럴 지역의 유독물질 매립사건도 그렇듯이 실제로 오염물이 매립된 시점과 환경피해(다행히 캠프캐럴 주변지역에서는 아직 매립작업에 투입된 인력을 제외한 민간인에 대한 구체적 피해사례는 확인된 것이 없다.)가 나타나는 시점과는 수 십 년 혹은 그 이상의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토양오염의 확산이 물에서나 공기에서와는 다르게 매우 느린 속도로 일어나고, 오염물질의 자연적 분해과정도 매우 느리기 때문이다. 토양환경문제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지가 선진국에서도 불과 30-40년에 지나지 않고, 국내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된 것은 1995년에 이르러서이므로, 우리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을 과거의 부주의로 인한 토양환경문제가 지

금 혹은 가까운 미래에 와서 부각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필자가 직접 조사작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캠프 캐럴 지구에 많은 양의 화학물질이 미국의 슈퍼펀드법 제정 이전에 매립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1970년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매립당시에는 미국 자국내에서도 슈퍼펀드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고, 해외주둔지에 1-2년 머무는 주둔군의 입장인 유독 화학물질 관리담당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자국 영토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염물의 매립문제를 심각히 고려했을 것으로 보이기도 않는다. 관련자 증언 등에 따르면 매립지로부터의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기본시설인 고밀도폴리에틸렌막(high-density polyethylene (HDPE) membrane) 등을 설치하지 않고 토양굴착 후 그대로 화학물질을 매몰했으며, 엇갈리는 주장에 따르면 이후 (아마도 슈퍼펀드법 제정에 따른 미국 내 토양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오염물을 포함 한 드럼통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을 수도 있다. 토양오염도의 조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에서의 오염도를 조사하는 것이기에 조사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과거의 환경오염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절실하다. 현재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독성 화학물질의 주변 토양 내 잔류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어떤 물질이 어느 위치에 얼마 동안 묻혀졌는지에 대한 충분한 기초 정보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엽제에 부산물로 포함되어 있는 다이옥신류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토양에서 이들 물질들이 일부 검출이 되기는 하지만,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이옥신류만을 생각하면 일단은 다행인 일이지만, 환경오염조사의 특성상 검출대상 물질을 제외한 다른 잠재적인 독성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토양오염에 따른 잠재적 환경피해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치 제한된 정보로 상황을 평가해야 하는 일종의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보도되어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문제가 되었기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당국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럴 때일

수목 미군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오염경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오염도 평가 및 잠재적 인체/생태위해성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정도를 걷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의 확산을 통한 사회전반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인 것은 이 사건이 환경피해의 보고로 인해 이슈화된 것이 아니라, 매립작업에 참여했던 내부인력들로부터 이슈화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링 작업이 요구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과 생태계피해 등이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예방차원에서 적절한 오염도 관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큰 피해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찌면 이 사례는 우리 사회

가 환경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적/문화적으로 성숙도를 갖춘 사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법이 슈퍼펀드법으로 명명된 이유는 석유세, 화학원료물질세, 수입화학물질유도체세, 환경법인 소득세, 일반조세, 이자 및 회수된 자금 등을 기금으로 한 막대한 환경기금을 조성하고, 토양오염문제에 대해서 오염자부담원칙을 강력하게 소급 적용하여 토양오염대책(정화작업)을 강제로 집행하게 될 시 오염원인자가 행정명령을 불이행시에는 앞서 조성한 기금으로부터 정부가 우선 처리하고, 소요된 비용을 징벌적으로 책임당사자에게 청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보는 현안 이슈

## 고엽제의 건강 영향

의학부 산업의학교실 민경복

산업의학(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전문의로서 필자의 업무가 직업성 또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평가 및 치료이다 보니 외래 진료에서 고엽제 노출 환자를 흔히 접하게 된다. 이 분들은 대부분 월남전에 참전한 전역 군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외에 가끔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전방에서 휴전선 철책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분들도 만나곤 한다.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고 진료를 보던 초창기에는 고엽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내용이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이제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고, 이 법률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법의 제5조를 보면 고엽제 후유증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혈액암(만성 골수성 및 림프성 백혈병, 비호지킨스 임파선 암), 암종(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심혈관질환(버거병, 허혈성 심질환, 동맥경화증), 뇌혈관질환(뇌경색, 뇌출혈), 신경질환(다발성 신경마비,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다발성 경화증)과 다양한 피부질환(염소여드름, 일광과민성피부염, 지루성피부염), 심지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40종에 이르는 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덧붙여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등 자녀의 유전적 질병 까지 포함되어 있다.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자가 군인으로 근무하던 도중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고엽제에 노출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고엽제 노출에 대한 건강장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법적인 시스템을 가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중 하나이다.

"고엽제"는 낙엽제(defoliant)의 속칭으로 주로 수목에서 잎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의 일종이다. 농업용으로는 현재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뿐 만 아니라 전세계인에게 이처럼 잘 알려지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월남

전 때문이다. 월남 전 당시 밀림에 숨어서 저격하는 베트남에게 괴롭힘을 당한 미군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적에게 은폐 수단으로 이용된 거대한 밀림을 제거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군사적인 대처 수단으로 베트남을 제거하거나 탐지하기 보다는 광활한 밀림을 제거하기로 한 발상은 그야말로 미국적인 것이었고, 이를 위하여 엄청난 양의 고엽제(전쟁기간을 통틀어 최소 5만 톤 이상)가 비행기를 통하여 살포되게 된다. 한여름에 낙엽이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광활한 밀림지역을 목격한 한국 중군기자들은 아마도 작전의 규모와 무지막지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고, 이들이 쓴 기사는 '고엽작전' 이라는 이름으로 신문지상에 대서특필하게 된다. 여기에서 '고엽제'라는 속칭이 정식 명칭을 대신한 표준 용어로 자리잡게 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 작전에 사용된 농약에 'Agent Orange'라는 속칭을 붙이게 되는데, 한미 양국이 모두 정식 명칭 보다는 속칭을 사용하는데 집착한 걸 보면 이 새로운 화학무기를 사용하면서 뭔가 찝찝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Agent Orange라는 속칭은 용기의 드럼통에 다른 물질과 구별하기 위해 밝은 오렌지 색을 칠해 보관하였기 때문이다(약제의 색깔은 오렌지색이 아니다).

1950년대에 화학자들은 대단히 효과적인 제조체를 개발하는데, 이 화학물질은 다소 긴 명칭인 "2,4-이염화페녹시아세트산" 이라는 정식 명칭 대신 2,4-D라는 약칭으로 불리운다. 2,4-D에 염소원자를 하나 더 붙이면 특정 식물에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몇 년 뒤 밝혀졌는데, 이 물질에는 2,4,5-T 라는 약칭이 붙여졌다. Agent Orange 는 바로 2,4-D 와 2,4,5-T를 1:1.2로 혼합하여 제조체로서의 효과를 극대화 한 것이다. 이 농약 자체는 독성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살포를 위해 준비된 용액을 기준으로 수백 리터를 마셔야 사망함), 문제는 초미량으로 함유되어있는 불순물인 다이옥신이다. 당시 기록을 보면 불순물로 포함된 다이옥신의 농도가 수 ppm 정도 였다고 하니, 200리터 들이 드럼통 하나를 뿌릴 때 1그램이 못 미칠

정도의 농도이다. 여러 가지 화합물 군으로 구성된 분류 명칭인 다이옥신(dioxin)은 인류가 합성한 최악의 독극물로 분류되는데, 실험동물로 흔히 쓰이는 기니피그의 경우 치사량은 체중 1 kg 당 1 μg 밖에 되지 않는다. 다행히 인간에 가까운 영장류에서는 이보다 치사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암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환을 발생시키는 농도는 치사량 보다는 훨씬 낮은 것임엔 틀림없다.

미스터리 스틸러 영화로 잘 알려진 팀 로빈스 주연의 ‘아굽의 사다리(Jacob’s Ladder, 1990)’에 보면 베트남 참전이후 원인 모를 환각증상에 시달리던 주인공이 그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참전 동료들을 조사하고 국방부는 비밀을 은폐하려 음모를 꾸민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비밀리에 실험한 환각제로 나오지만 이는 당시 미국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고엽제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동안 다이옥신의 건강 유해성 유무에 관해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다이옥신이 수 많은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 점점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새

로운 질병과의 연관성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필자의 경우도 지난 달에 해외 학술지인 Atherosclerosis 에 염소계 농약의 노출이 말초혈관 질환을 발생시킨다는 연구결과를 게재한 바 있다. 다이옥신의 공포는 이처럼 아직 진행형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경북 칠곡의 캠프 캐롤에서 고엽제 250 드럼을 매몰처분했다는 미군의 증언을 필두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고엽제에 의한 환경오염이 부각되고 있다. 매몰처분의 적법성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걸려 흐지부지 넘어갈 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고엽제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사용을 중단한 시점이 1970년 12월 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미군 당국의 처사는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부디 냉전의 잔재라 할 수 있는 고엽제의 환경 문제가 한 점 의혹없이 말끔히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소 식

지난 5월 26일 교직원 식당에서 제37차 교수회 대의원회가 개최되었다. 보고사항으로서, 등록금으로 대납한 재단의 법정 부담금 환수 공청회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현재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본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안건 토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토의되고 결정되었다.

1) 학생들이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환수 요구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함. 공동 성명을 한다면 교수회에서 지원할 것이다. 성명서 서명의 위임을 대의원회에서 모두 동의함.

2) 건축비를 예산과 실제 공사비를 대조해볼 필요가 있음. 다음 대의원회까지 최근 지어진 건물의 건축비를 샘플 케이스로 예산과 실제 공사비를 대조하여 문제점을 밝혀내는 것에 모두 동의함.

3) 연구진실성에 있어 자의적, 독선적으로 덮어버리려 하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공격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함. 연구진실성 기준을 마련할 규정, 지침을 교수회 스스로가 만들어 9월 교수회의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제안함. 교수회 내에서 연구진실성 관련 안을 제정하는 것에 모두 동의함.



2011년 5월 26일 제 37차 대의원회

“대학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이다. 학교 행정은 기업경영과는 달리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자를 어떻게 이해시킬지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소통의 핵심은 신뢰이며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소통해도 소용없다. 신뢰가 생기려면 무작정 믿어달라고 하면 안 되고 자신이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선의를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2011년 6월 1일 안철수

(KAIST에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기며 던진 말)

## 김준엽 선생님을 기리며

교수회 의장 김철환

우리 아주대학교의 재단인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이사장 (1989~1999년)이셨던 김준엽 선생님이 지난 6월 7일 향년 91세로 별세하셨다. “일제 맞선 광복군. 독재 맞선 참스승.. 울곧은 ‘90년 장정’”이라는<한겨레> 6월 8일자 제호는 선생님의 일생을 압축하여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 시대 참스승을 잃었다”는 슬픔과 아쉬움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적신다.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나의 참스승을 잃었다. 빈소에 조문을 다녀왔지만 아쉬운 마음 그치지 않아 대우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셨을 때 맺었던 인연을 회고하여 그리운 존경의 마음을 더한다.

선생님이 1989년에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군사정권에서 선생님을 “국무총리로 데려가려고 여러 번”이나 시도했으나 이를 물리쳤던 분이 고대 총장직에서 물러 난지 4년 만에 특별한 인연이나 매력이 없던 우리학교의 이사장직을 쾌히 허락하셨으니 말이다.

추측컨대 선생님의 울곧은 성품과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이사장직을 수락하게 만든 원인(遠因)이었으리라. 선생님의 교육자로서의 자긍심과 울곧은 성품은 “1949-1982년 사이의 이력은 고려대 조교수, 부교수, 교수”라는 군더더기 없는 이력 적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하지만 어찌 선생님이 이 기간에 내세울 이력이 없었겠는가.

선생님의 아주대학교에 대한 사랑은 유별났다. 평생을 봉직하신 “고려대학교 이상으로 아주대학을 애끼”셨다. 마치 “늦게 얻은 자식”처럼 아주대학교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부시었다. 열어 놓아도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건물의 창호를 개조하는데 학교 재정으로는 부담이 크다는 말을 듣고는 외부에서 재정지원을 얻으셔서 이를 해결하시었다. 학교 도서관의 예산으로는 교수들의 연구에 필요한 전문서적을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는 설립자인 김우중 회장에게 부탁하여 3년간(다시 3년을 연장) 당시로는 파격적인 도서구입 재원을 확보하시었다.

울곡관과 원천관 앞, 그리고 도서관과 법전원 사이의 고고하게 자리 잡은 소나무는 시화공단 조성시에 우리학교로 이식된 나무들이다.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나무의 수송과

이식비용이 만만치 않아 교비로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들으신 선생님이 재단지원으로 이를 해결해 주시었다. “학교에는 나무가 많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연구실 밖을 내다보고 있으려니 울곡관 앞의 소나무가 내 가슴을 더 여리게 만든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사장의 역할”은 단순하시고 명료하시었다. “학교의 행정은 총장이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사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외부에서 확보하여 학교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과거 고려대학교의 총장을 하시면서 얻으신 교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선생님은 이사장 재임기간 내내 이러한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셨다.

선생님은 재임 기간에 두 분의 아주대학교총장을 선임하시었다. 선생님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총장을 선임하시었다. 이런 절차에 의해 선임된 총장님들에 대하여 교수들은 축복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선생님은 경주에서 열린 교수회의에 설립자도 모시고 다른 이사들도 함께하시면서 교수들의 의견과 불만을 다 들어주시었다. 지금으로 보자면 가히 파격적인 교수사회에 대한 배려와 마음쓰임이었다. 이 기간이 아주대학교가 괄목한 발전을 이룩한 시기이다.

우리 아주대학교 구성원들은 선생님이 10년 동안 아주대학교에 쏟은 애정을 소중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마음 깊게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선생님이 그토록 소망했던 100만권 장서의 12층 도서관을 선생님이 찍었던 자리에 세우면서 선생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군더더기 없는 선생님의 성격이 “김준엽 도서관”의 명칭을 마다하지 걱정이지만. 선생님의 아주대학교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시었으니 허(許)하시리라. 영전에 꽃 한 송이 놓고 다시 한 번 재배하는 마음으로 명복을 빈다.

편히 잠드소서.

2011. 6. 12 김철환



##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 괜한 헛생각이었기를 바라는 마음

대학생들이 등록금 비싸다고 촛불 들고 다시 아우성이다. 이를 보고 있는 교수들 또한 마음 편할 리 없다. 대학에서 밥벌어 먹고사는 연유이기도 하거니와 그래도 명색이 지식인(혹은, 그 근처에서 어슬렁대는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교수들 중에 ‘제 돈 내고 저 좋아 다니니 싫으면 그만 두라’고 생각하는 급진적 시장주의자가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대부분은 영국의 사회 비평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을 각성시키고 괴롭혔던 “그 놈의 고약한 양심 부스러기” 때문에 마음 편치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허나 우리가 대학이라는 학문 공동체에서 삶과 삶의 존재감을 획득해 가는 인격이라면 대학 등록금의 사회적 논의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무감에서라도) 눈여겨보아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단순한 돈의 문제에서 돈을 둘러싼 대학 개혁의 문제로 서서히 치환되고 있다는 말이다. 좀 억울하다는 마음도 없진 않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든다. 정부는 사립대학에 지원은 쥐꼬리만큼 하면서도 감싸라 배나라 시어머니 노릇만하니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사립대학 운영진들의 한심한 행태를 보면 “매를 번다.”는 옛 말 그대로이다. 이른바 대학 운영의 도덕적 해이 문제다. 학생들 등록금으로 대학 운영하면서 그들 위에 군림하는 운영진들의 행태가 언론을 통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가당찮은 것이 적지 않아 이들 대학에 비하면 아주대 정도면 양반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아주대가 이러한 대학들을 따라잡으려는 것이 아닐 바에야 우리의 눈은 좀 더 나은 행태의 대학으로 향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관행이라느니 다른 대학은 더하다느니 하면서 우리의 문제점을 정당화시키려는 언행을 일삼는 사

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들이 기대어 말하는 대학으로 우리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번 호 특집은 <기획처> 업무였다. 비록 대 언론 보도자료 방식으로 준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와 닿는 것이 좀 덜하기는 하지만) 기획처가 마련한 답변에만 의존하자면 아주대의 앞날은 밝고 과거의 문제점들은 해결되었다. 건축비에 대한 의구심은 괜한 헛 의심일 공산이 크다. 진정 그렇기를 바란다. 그러나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대학발전을 위한 담론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획처의 답변은 아직 우리를 진실에 목마르게 한다. 2010년도 결산 자문 회의에서 제기한 각종 의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답해줄 각종 서류와 자료가 요청된 지 달 포가 지난 지금에도 일차 자료조차도 전달되고 있지 아니한 현실을 어찌 해석해야 옳은 것인가? 아울러 그간의 각종 의구심들을 단 칼에 해소하고자 누차 요구한 공개 토론은 허공에 대고 지른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 대학 개혁은 거대한 담론과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카리스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대개 실패하거나 아니면 성과를 보더라도 후유증이 너무 크기 마련이어서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경우가 적잖았다. 개혁이란 그래서 소나기가 아니라 봄비처럼 스며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소통하겠다는니 겸손하겠다는니 화려한 언사는 난무하는데 막상 서류제출과 같은 소소하지만 촉촉하게 스며드는 해갈의 기운은 아직 느끼기 힘들다. 진정성이 느껴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말이다. 짜증나는 관료주의적 임기응변이 이러 저러한 의문들을 헛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은 요즘의 심정이다. 김빠질 구멍은 막혀있고 밥술의 압력은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말이다.

탁류청론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 강명구(편집책임), 구형건, 김상배, 김혜선, 이재호, 한호.